美 TSA의 드론 비행제한 고지 내용 및 항공보안 시사점

– 공화당 중간전당대회 사례로 본 '고지–탐지–집행' 드론 통제 모델 –

발행일 2026. 9. 21. | 제2026-9호

미국 TSA 등 연방기관이 9. 9.~9. 10. 댈러스 공화당 중간전당대회를 앞두고 행사장 반경 3마일·고도 400피트 드론 비행금지와 최대 7만 5천 달러 과태료·형사처벌을 사전 고지

→ 이번 조치는 '제한공역 설정 → 사전 고지 → 탐지·식별 → 법 집행'이 한 절차로 이어진 통제 모델

→ 항공보안협회는 「공항인근 중요행사 계기 임시 드론 통제 표준모델」을 정책과제로 연구 방침

□ 행사 개요 및 고지 내용

- (행사개요) 댈러스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에서 **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** 개최(대통령·부통령 참석, 2만 명 방문)
- (참여기관) TSA 연방항공보안관실(FAMS)·비밀경호국(USSS)·FBI·관세국경보호청(CBP)이 **9. 8. 합동 고지**
- (고지내용) FAA 임시비행제한(TFR)을 근거로 행사장 일대를 **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**

구분	내용
제한 구역	행사장 중심 **반경 3마일(약 4.8km)**. 대통령 이동 지점에는 별도 제한 가능
제한 고도	지상부터 **400피트(약 120m)**까지
적용 시간	9. 9. 14:45 ~ 9. 11. 22:45 (행사 전후 포함)
제한 대상	승인받지 않은 **모든 드론**. 경찰·경호용 등 승인 기체만 예외
Remote ID	방송 의무 유지. **"기능을 꺼도 불법 비행 탐지를 피할 수 없다"**고 명시
확인 방법	비행 전 FAA 승인 B4UFLY 앱에서 실시간 제한 정보 확인

- (위반시 처벌수위)
  - 민사 : 위반 1건당 **최대 7만 5천 달러(약 1억 원) 과태료**, 기체 몰수, 조종자격 정지·취소
  - 형사 : 고의성·위협성에 따라 **최대 10만 달러 벌금과 1년 이하 연방 징역** 별도 가능

□ 미국의 4단계 드론 통제 체계

가. 통합대응 절차

- 이번 조치는 단순한 '비행 자제 요청'이 아님. **공역 제한부터 처벌까지 네 단계가 끊김 없이 연결**된 통합 대응

① 제한공역 설정
FAA
TFR·NOTAM 발령
반경·고도·시간 확정

→

② 사전 고지
TSA 등 합동 발표
언론·B4UFLY 등
"몰랐다" 주장 차단

→

③ 탐지·식별
USSS 대드론 체계
Remote ID·RF·레이더
조종자 위치 특정

→

④ 법 집행
경찰·FAA·FBI
검거·기체 압수
행정제재·형사절차

나. 기관별 역할 분담

- 각 기관이 가진 법적 권한에 따라 **공역규제·고지·탐지·경호·수사·처벌을 각각 분담**하는 구조

기관	주요 역할
FAA	TFR·NOTAM 발령, 공역 통제, 항공법상 행정처분(과태료·자격 취소)
TSA·FAMS	항공보안·대테러 관점의 위협정보, **대국민 고지와 기관 간 협조 창구**
USSS	대통령·부통령 경호, 드론 위협평가, 승인된 범위의 대드론(C-UAS) 대응
FBI	불법 드론 운용자 식별, 테러·중대 위협 수사
CBP 등 DHS	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대드론 장비·기술 지원
지방경찰	조종자 수색·검거, 현장 통제, 증거 확보(댈러스 경찰·텍사스 공공안전부)

다. 현장 대드론 대응

- 비밀경호국은 탐지에 그치지 않고 **드론–조종자 간 통신을 가로채 조종자 위치를 역추적**하는 능동형 장비를 운용

  * 해리스 USSS 부국장 : “미승인 드론은 위협 여부를 평가해 조치”. 2024. 7. 버틀러 피격 사건 이후 강화된 체계

- 통신개입·무력화 같은 능동 대응은 **법률상 권한을 받은 연방기관만 가능**

□ 평가 및 진단

가. 핵심은 ‘장비’가 아니라 ‘연결’

- 탐지장비만 있고 검거가 없으면 억지력이 없고, 금지만 공고하고 탐지·출동이 없으면 법 집행으로 연결 불가
-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해야만, 위반자의 **고의성을 입증**하고 몰수·과태료·형사처벌의 근거로 활용 가능

나. Remote ID만으로는 부족

- Remote ID(드론 전자번호판)는 승인 드론과 미승인 드론을 구분하고 조종자 위치를 찾는 데 유용
- 기능을 끄거나 변조한 드론, 자작·개조·자율비행·군집 드론은 **RF·레이더·전자광학·열상 다중센서**로 대응

다. 공항 공역과의 연계

- 행사장은 댈러스 도심, 러브필드 공항과 약 8km 거리 → 행사장에서 밀려난 드론이 **공항 접근경로로 이동할 위험**
- 중요 정치 행사 보안과 인접 공항의 공역 보호를 **하나의 작전으로 묶어서 실행한 사례**로 평가

□ 항공보안 측면의 시사점

가. 행사 연계 임시 드론 제한의 표준절차

- 정상회의·국제대회·대형 정치행사가 공항 인근에서 열리면 공역 지정·비행승인 제도로 **행사별 임시 제한구역 설정**

  → 위험평가 → 제한 범위·시간 → 고시·앱 연동 → 승인 드론 목록 → 탐지 배치 → 검거·처분을 한 절차로 표준화

나. 제한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홍보

- 항공고시보만으로는 일반 조종자가 알기 어려움 → **지도 기반 앱(드론원스톱 등)·문자·언론**으로 반복 고지

다. 공항·행사장 공동상황실 운영

- 국토부·지방항공청, 국가정보원, 군, 경찰, 경호처, 공항운영자, 관제기관, 대드론 운용기관이 **승인 드론 목록·탐지정보 실시간 공유 및 대응**

라. 무력화 권한과 책임 정비

- 전파차단·항법교란·포획은 항행시설·제3자 안전에 영향 → **누가, 어떤 조건·승인으로 쓰는지** 권한과 책임 명확화

마. 표준모델에 담을 항목

- 협회는 **행사 전·중·후를 잇는 전주기 절차**를 적용, 「임시 드론 통제 표준모델」 연구를 추진할 방침

단계	포함 내용
행사 전	드론 위협·취약성 평가, 제한구역 범위·고도·시간 설정, 고시와 앱 연계, 승인 드론 사전등록
행사 중	다중센서 탐지·식별, 관계기관 합동상황실 운영, 위협단계별 대응과 무력화 승인절차 검토
행사 후	조종자 검거와 디지털 증거관리, 행정·형사처분 연계, 대응 결과 평가와 절차 보완

□ 결론

- TSA 발표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**공역통제·고지·탐지·집행을 하나로 묶어 불법 비행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형 모델**
- 우리도 공항 인접 국가 중요행사에 **'임시 드론 제한 + 공항 공역 보호'를 하나의 통합계획**으로 운영할 필요
- 협회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, **「중요행사 계기 임시 드론 통제 표준모델」을 정책과제로 연구** 방침

※ 참고자료

- Drone restrictions during RNC Midterm Convention (TSA 보도자료, 2026. 9. 8.)
- Drone restrictions cover DFW during President Trump's visit (NBC 5 Dallas-Fort Worth, 2026. 9. 8.)
- Secret Service drones to help protect Trump during Dallas visit (FOX 4 Dallas-Fort Worth, 2026. 9.)
- RNC Airspace Closed To Drones (Aero-News Network, 2026. 9.)
- RNC Midterm Convention in Dallas brings tight security, road closures (CBS Texas, 2026. 9.)